

개방화에 따른 궁핍화 가능성

최 세 균* 김 동 민**

1. 머리말
2. 개방화와 사회후생
3. 개방화와 국내왜곡
4. 개방화와 궁핍화
5. 맺음말

1. 머리말

국제무역 이론에서 핵심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역으로부터의 이득(Gains From Trade, GFT)이다. 교역 당사국들이 비교우위 이론에 의해 교역을 할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국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GFT 이론의 기본적인 명제이다. 이러한 가정은 개방론자들과 국제 무역협상에서 무역자유화, 개방화를 위한 기본 논리로 인용되어 왔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등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상에 있어 명분을 제공해 오고 있는 무역으로부터의 이득에 관한 이론은 1939년도에 사무엘슨(Samuel-

son)에 의해 체계적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경제왜곡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그는 비교우위의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현시선호 이론을 도입하여 GFT를 증명함으로써 지금까지 노동가치설, 기회비용설 등에 의존한 비교우위 이론의 비판대상을 제거한 바 있다.

이러한 복잡한 증명의 과정없이 GFT가 성립하는 가장 단순한 조건은 자발적 교역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발적 교역 또는 교환은 관련된 쌍방 모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A의 새 자동차와 B의 현 오토바이가 서로 교환 되고,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였다면, 이들의 효용은 교역을 통해 모두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예는 극단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교역에서 자발성의 가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교역의 자유화 경향은 어떠한가?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UR) 협상이라는 외부요인에 의한 농업부문의 개방화는 자발적이기보다는 강제적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농업부문의 개방화로 무역으로부터

* 부연구위원.

** 책임연구위원.

터의 이득을 취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 가정(예: Krueger 1980)에 강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또한 개방화가 오히려 궁핍화(Immiserization)를 가져올 수도 있다. 교역이 궁핍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특수한 현상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현실 경제속에서 그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개방화가 궁핍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를 검토하고, 이러한 경우가 존재한다면 그 가능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개방화 시대의 농업정책 수행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GFT를 확보하여 농업부문의 개방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2. 개방화와 사회후생

무역으로부터의 이득은 모든 개개인이 무역으로부터 이득을 얻는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이 GFT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 즉, 보상을 전제로 할 것이다. 따라서 GFT는 무역으로부터의 이득을 취한 사람(집단)이 손해를 보는 사람(집단)에게 최소한 교역 이전의 상태만큼 보상해 준다는 가정이 전제된 “잠재적(Potential)” 개념이다. 이러한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무역으로부터의 이득은 이론과 같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효용 또는 복지 수준은 그 사회내에 존재하는 재화의 규모에만 의존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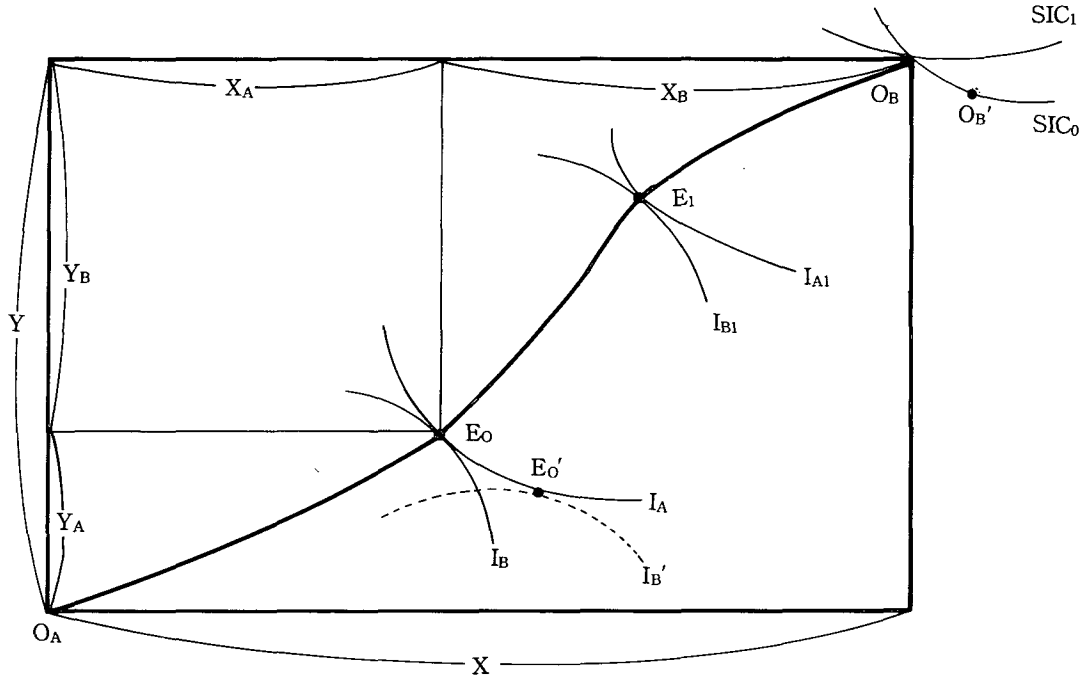
은 아니고 재화의 분배에도 의존한다. 즉, 재화의 구매력을 결정하는 소득의 분배에 따라 사회적 효용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논의는 스키토프스키(Scitovsky 1942)의 사회적 무차별곡선(Social Indifference Curve, SIC)이 잘 설명하고 있다.¹ 따라서 사회적 무차별곡선을 유도하고 개방화에 따른 사회적 무차별곡선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스키토프스키의 사회적 효용곡선을 사회의 구성원(집단)이 A와 B 둘이며,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재화는 X와 Y 둘이라고 가정하여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무차별곡선의 성질은 정상적인 경우를 가정하자. 먼저 A의 무차별곡선은 원점 O_A 에 대하여 볼록하고, B의 무차별곡선은 원점 O_B 에 대하여 볼록하다고 가정하자. 우리는 임의의 무차별곡선 I_A 와 I_B (여기서 하첨자 A와 B는 구성원을 나타냄), 그리고 이들이 만나는 점 E_0 를 가정할 수 있다<그림 1>.

점 E_0 에서 X_A 만큼의 X재와 Y_A 만큼의 Y재는 A의 효용 수준을 I_A 만큼 보장한다. 재화의 결합 (X_B, Y_B)는 B의 효용 수준을 I_B 만큼 보장한다. A의 효용 수준 I_A 와 B의 효용 수준 I_B 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X재와 Y재의 최소결합을 O_A 를 기준으로 하면 O_B 가 된다. O_B 에서 SIC의 기울기는 E_0 에서 I_A 또는 I_B 의 기울기와 같다. SIC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I_A 를 고정시키고 I_B 를 I_A 에 접하도록 움직이면 된다. 이때에는 항상 I_A 와 I_B 의 움직임(예; I_B')을 보장하는 X재와 Y재의 사회적 최소

¹ 사회후생함수는 대략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 롤즈적 사회후생함수 등 3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적 형태인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를 전제로 한다.

그림 1 사회적 무차별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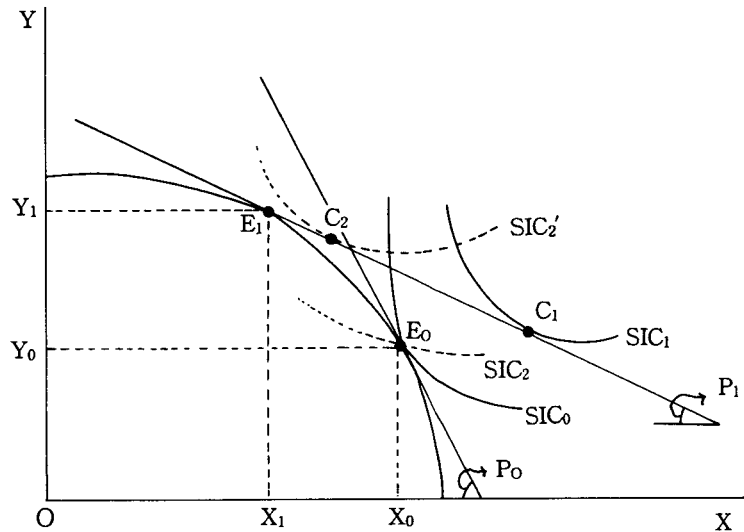
결합은 O_B 가 된다. 그러나 I_A 와 I_B' 이 접하는 E_0' 에서 SIC 의 기울기는 E_0 에서와 다르다. 즉,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우리는 O_B 를 통과하는 사회적 무차별곡선 SIC_0 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에서 사회적 소득분배정책을 통해 A의 효용을 I_{A1} 으로 향상시키고 B의 효용은 I_{B1} 으로 다시 감소시킨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때 균형점은 E_1 이 된다. 그러나 I_{A1} 과 I_{B1} 을 보장하는 X재와 Y재의 최소 사회적 결합점은 O_B 로 E_0 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O_B 에서 SIC 의 기울기는 E_0 의 그것과 다르다. SIC_0 를 유도하듯이 증가된 A의 효용 그리고 감소된 B의 효용 수준을 가정한 SIC 를 유도하면 SIC_1 과 같이 된다. 이와 같이 파레토 최적의 상태에서 어느 한 집단의 효용을 감소시키고 다른 한 집단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분배정책은 사회적 무차별곡선의 변화를 가져온다. 점 $O_A E_0 E_1 O_B$ 를 연결한 것이 사회적 효용곡선이 되며 이는 파레토 최적상태에서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

무역의 자유화에 의한 GFT는 첫째, 생산의 효율성, 둘째, 소비의 효율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가정을 <그림 2>를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자.

먼저 수입개방 이전의 균형점을 E_0 라고 하면, E_0 에서 사회적 효용곡선 SIC_0 와 생산가능성 곡선이 접하게 된다. 이때 가격비는 P_0 (X재 가격을 Y재 가격으로 나눈 것)가 된다. X재를 농산물 Y재를 공산품이라고 하면, P_0 는 공산품 가격으로 평가된 농산물 가격을 나타낸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어 농산물 가격이 P_0 에서 P_1 으로 하락하였다고

그림 2 무역과 사회적 효용의 변화



하면, 농산물 생산은 X_0 에서 X_1 으로 감소하고 공산품은 Y_0 에서 Y_1 으로 증가한다. 이것이 국제가격에서 평가된 생산의 효율성 증가이다. 생산은 E_1 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소비는 C_1 에서 이루어지며, E_0 에서 C_1 으로의 이동은 교역에 의한 소비의 효율성 증가가 된다. 따라서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으로 사회적 효용은 SIC_0 에서 SIC_1 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무차별곡선의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무역으로부터의 이득을 무역으로부터 손해를 보는 집단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만약 <그림 1>에서와 같이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농업부문 종사자들의 소득감소와 이로인한 무차별곡선의 이동(I_B 에서 I_{B1} 으로의 이동)과 비농업부문으로부터 농업부문의 효용을 I_B 수준으로 유지할

만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면, GFT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농업부문에 대한 수입개방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사회적 무차별곡선을 그림1에서 SIC_1 로 볼 수 있다. 이때 <그림 2>에서 사회적 무차별곡선은 SIC_2 (점선 형태)가 되고 국제가격 P_1 에서 소비의 균형점은 C_2 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SIC_1 과 SIC_2' 의 효용 수준을 비교할 수 없게 된다. 어느 것이 높은 효용 수준을 나타내는가를 판단할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수입개방 이전의 효용 수준 SIC_0 와 SIC_2' 도 비교할 수 없다. 즉, 수입개방으로 사회적 효용이 증대한다든가 GFT가 발생한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집단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증명할 수 없다. SIC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는 최초의 균형점(무역 자유화 이전) E_0 보다 낮은 소비

수준의 균형점도 발생하며, 이는 무역이 궁핍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UR 협상의 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개방화, 국제화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대시키려면 개방화로 손해를 보는 집단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개방화의 명분으로 작용하는 자유무역의 이득에 대한 정당화의 방안 가운데 하나가 되며 또한 자유무역을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를 통한 국민복지 향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개방화로 손해를 보게되는 집단을 그대로 둔채 무역으로부터의 이득이나 무역을 통한 효용의 증대를 논하는 것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장기적으로 비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될 수 있다.

3. 개방화와 국내왜곡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교과서적 강한 가정을 벗어나 더욱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국내왜곡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국내왜곡 현상은 생산부문, 소비부문, 요소시장부문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왜곡과 무역과의 관계에서 논의된 것 가운데 하나는 국내왜곡이 존재할 때 무역의 자유화가 반드시 무역으로부터의 이득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궁핍화(Immiserization)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소시장의 왜곡과 관련하여서는 어명근(1993)에 의해 정리된 바 있고, 정책적 왜곡 현상은 소비부문보다는 생산부문에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세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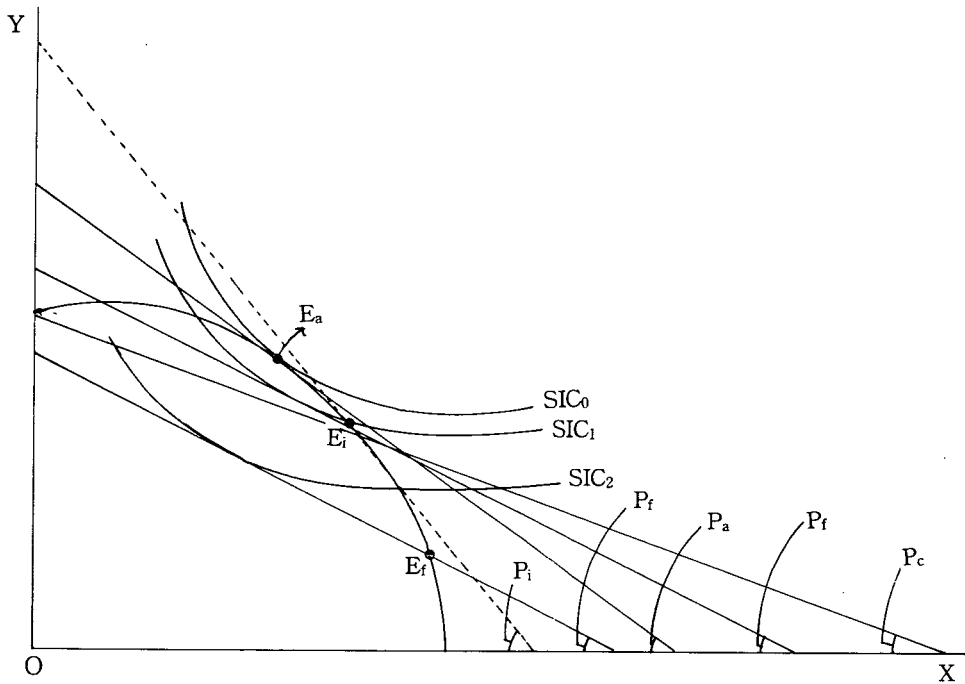
지 국내왜곡 가운데 생산부문의 왜곡 현상과 무역으로부터의 이득에 관하여만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3>은 두부문 일반균형 모형을 가정하였으며, 생산과 소비부문은 각각 한계대체율 체증과 체감의 성질을 가지는 일반적인 매끄러운 형태의 함수를 가정하였다. 먼저 무역 이전 폐쇄경제 상태에서의 균형점은 E_a 로 하였다. E_a 에서 수요의 한계대체율과 생산의 한계대체율은 일치하며, 점점의 기울기인 P_a 가 균형가격이 된다.

앞서와 같이 X재를 농산물, Y재를 공산품이라고 가정하고, 농업부문에 생산자 가격지정책이 도입되었다고 하자. 이 때 생산자가 직면하는 가격은 지지가격 이전의 국내 균형가격 P_a 보다 높은 P_1 가 된다(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가격을 공산품가격에 대한 농산물의 상대가격으로 나타내고 있어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상대가격 P는 높아짐). 따라서 농산물에 대한 지지가격 정책으로 농산물(X)의 생산은 증가하고 공산품(Y)의 생산은 감소하게 된다. 생산의 균형점은 E_a 에서 E_1 로 이동한다.

폐쇄경제하에서 소비는 생산과 같다. 따라서 소비도 E_1 에서 이루어지지만 상대가격 변화로 소비자가 직면하는 가격은 P_1 가 아니다. X의 생산은 증가하고 Y의 생산은 감소하여 시중가격은 X에 대한 가격지지가 없을 경우에 비해 낮아진다. 즉, 농산물의 상대가격이 P_a 보다 높아진다. 시장가격 또는 소비자가격은 E_1 에서의 사회적 무차별곡선 SIC_1 의 기울기 즉, P_c 가 된다. 따라서 경제왜곡의 도입으로 사회적 효용은 SIC_0 에서 SIC_1 으로 감소한다.

그림 3 국내생산의 왜곡과 공핍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역이 자유화되었다고 가정하자. 만약 국제가격(P_f)이 P_a 와 P_c 사이에 있다면, 가격지지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이 국가는 Y재를 수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P_f > P_a$ 로 X재의 국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다. 그러나 국내왜곡이 도입된 후의 X재의 국제가격은 국내가격(P_c)보다 높아 이 국가는 오히려 X재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국가는 점차 X재로 특화해 나가게 되고 특화가 진행될수록 사회적 효용은 감소한다. 만약 특화가 E_f 까지 진행된다면 사회적 효용의 감소는 SIC_0 와 SIC_2 의 차이만큼이 된다.

위의 예는 국내왜곡 현상이 존재할 때 무

역의 자유화가 무역으로부터의 이득보다는 오히려 공핍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경제성장 또는 국민복지의 향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국내왜곡 현상의 제거가 필요하다. 특히 가격을 왜곡시키는 정책은 국민경제에 잘못된 또는 거짓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들은 거짓된 가격신호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경제전체에 큰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무역의 자유화, 개방화는 국내왜곡을 줄이는 효율성 제고와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UR 협상 이행은 농업의 개방

화와 함께 국내 농업보조 정책의 축소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 두 가지 경제왜곡 현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제거되는 왜곡 현상에 대한 보상으로 우회적 방법의 또 다른 경제왜곡 정책이 도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방화는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형평성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형평성을 고려한 직접 보상 방식이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개방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왜곡 현상을 줄여 효율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쌀의 경우도 국제화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쌀수매를 축소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직접보상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4. 개방화와 궁핍화

경제성장과 무역과의 관계 또는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증적으로도 많은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서도 크루거(Krueger 1980)는 경제성장에 있어 무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있어 무역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우리는 국내 왜곡 현상이 존재할 때 무역으로 인한 궁핍화의 예를 살펴본 바 있다. 이는 정태적 분석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성장 또는 생산요소나 기술의 진보를 가정

한 동태적 상황에서 그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바그와티(Bhagwati 1968)는 경제왜곡 현상이 존재할 때 궁핍화 성장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왜곡 현상이 존재할 경우의 궁핍화 성장 가능성은 바그와티 등의 정리에 미루어 두고, 경제왜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경우를 논의하기로 하자.

자본의 축적, 노동력의 증가, 기술발전 등 동태적 상황을 고려한 생산요소의 변화와 생산, 가격, 무역 등의 관계는 립진스키(Rybczynski) 정리와 관계가 있다. 립진스키 정리는 어느 생산요소(L)가 다른 생산요소(K)보다 더 크게 성장하면, 주어진 가격하에서는 L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부문(X)의 생산은 L의 증가분보다 많이 증가하고 다른 부문(Y)의 생산은 K의 증가분보다 적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때 무역유형의 변화는 불확실하다. L집약적 산업이 수출품이었다면 교역유형의 변화없이 수출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L집약적 산업이 수입부문이었다면, 교역유형은 변할 수도 있다.

<그림 4>는 립진스키 정리 가운데 가격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현실화하여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와 개방경제를 가정하여 경제왜곡 현상이 없는 경우에 교역으로 인하여 궁핍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X재 부문에만 기술 혁신이 발생하여 생산가능성곡선 Y_0X_0 가 Y_0X_1 으로 변화하였다고 하자. 만약 이 국가의 교역량 변화로 국제가격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 즉, 세계 무역에서 작은 국가(Small Country)라고 가정하면 가격선은 P_0 로 변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립진스키의 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X재의

요의 탄력성이 낮을 수록, 국제시장에서 수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그리고 수출국이 X재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컨대 UR 이후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논의되고 있는 사과나 배의 경우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탄력적일지는 모르나 일반적으로 탄력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많은 농가들이 이들 작목으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재배면적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교역조건악화를 통해 국제가격하락과 효용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수출되는 일부 품목은 일본 등 일부 국가에 크게 편중되어 있어 약간의 수출증가로도 수출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새로운 수요의 창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과 품종의 다양화, 가공 수요의 확대, 시장의 다변화로 생산의 증가와 수출증대가 가격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대외 지향적인 경제정책은 많은 국가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으로 인식되어 왔다(Myint 1984, Krueger 1980).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인구가 적은 경우에는 자급자족적 경제의 한계 때문에 대외 지향적 경제정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일부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인도, 중국, 브라질 등)의

경우에는 경제성장이 국내시장 지향적 경제정책으로도 어느 단계까지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 수출주도형 대외지향적 경제성장 정책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무역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교역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역의 자유화가 항상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교역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교역의 자유화에 따른 이득을 더욱 효율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무역으로부터의 이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현상으로 무역에 의한 사회전체적 손실 발생의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무역으로부터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줄여 나감으로써 대외 지향적 경제정책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역자유화와 사회후생, 무역자유화와 국내 왜곡현상,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한 공핍화 가능성 등 세 가지 경우만이 논의되었으나 이러한 논의가 기타의 상황을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위에서 논의된 세 가지 경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의 자유화가 소득분배 구조를 변형시켜 사회적 무차별곡선을 변화시킬 경우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무역으로부터의 이득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손실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역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집단이 손실을

보는 집단을 최소한 본래의 상태만큼 보상하고도 사회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무역으로부터의 이득에 관한 기본 명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개방으로부터의 피해 집단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개방화는 사회적 효용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명제가 무시된다면 개방화와 국민복지의 향상에 관한 논의는 무의미한 것이다.

둘째, 국내왜곡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방화를 추진할 경우 개방화는 국민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가격구조가 왜곡된 상황에서 개방화는 그릇된 전문화를 가져오고, 이는 부존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초래하여 개방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산의 효율성, 소비의 효율성, 규모의 경제, 기술정보의 교환 등 개방화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고 오히려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개방화와 함께 국내왜곡 현상의 시정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농업부문의 개방화에 따른 피해보상은 가격구조를 왜곡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직접소득보상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방화는 전문화를 가속화 시키게 된다. 각국의 부문별 전문화는 교역의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이때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농산물의 경우 수출증대는 수출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수출시장이 일부 국가에 한정된 경우 수출증가로 인한 수출가격의 하락 가능성은 그만큼 크다. 개방화로 인한 기술 및 자본집약적 일부 품목으로의 생산편중 및 수출증대 필요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수출증가가 수출가격의 하락을 초래하여

오히려 궁핍화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품목의 다양화, 가공 수요의 확대, 시장의 다변화 그리고 수출수요의 창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어명근, “생산요소의 지역성과 자유무역의 득실,” 『농촌경제』, 제16권 제2호(19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19-26.
- Bhagwati, J. N., “Distortions and Immiserizing Growth: A Generaliz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35 (1968), pp.481-485.
- Bhagwati, J. N., “Immiserizing Growth: A Geometrical Note,” *Review of Economic Studies*, 25(1958), pp.201-205.
- Chacholiades, M., *International Trade Theory and Policy*, McGraw-Hill Book Company, 1985.
- Flanders, M. J., “Agriculture versus Industry in Development Policy: The Planner’s Dilemma Re-examined,”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5 (1969), pp.171-189.
- Krueger, A. O., “Trade Policy as An Input to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70(1980), pp.288-292.
- Myint, H., “Exports and Economic Development of Less Developed Countries,” in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eds. Eicher and Staats, Johns Hopkins Univ. Press, 1984.
- Salvatore, D., *International Economics*,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990.
Samuelson, P. A., "The Gains from Inter-
national Trad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5(1939), pp.195-205.
Scitovsky, T., "A Reconsideration of the
Theory of Tariffs," *Review of
Economic Studies*, 9(1942), pp.89-
110.